제주포럼 기조 연설 (최종 원고)
2013.5.30 대한민국 제주도

신선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동아시아

전 일본 총리 겸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소장
하토야마 유키오

지난 해, 저는 26 년간의 정치인생을 뒤로 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생활을 하던 중 올해 3 월,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East Asia Community Institute, EACI) 설립의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을 목표로 하는 이 연구소의 설립은 제가 주창했지만 총리 재임 중에는 이룰 수 없었던 목표이며, 이런 공동체를 통해 우애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평화 확립에 공헌하려 합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에 반대하는 보수 인사들은 아시아가 유럽에 비해 종교, 문화, 언어가 다양하다는 점, 각 나라마다 민주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경제 구조와 경제 발전 단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성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각국과 영역들이 바다로 나뉘어 있는 탓에 문화적 교류가 어려우며, 영유권과 배타적경제수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 내의 협력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일본 정부가 미국이 표한 우려 때문에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언급을 일체 그만두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공동체의 결성이 어려운 이유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저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전통적 사고방식을 탈피할 필요성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는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장애물로만 여겨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우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배우는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다양성은 실제로 활력과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모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런 모순을 즉각적으로 “적대적 모순”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고 마오 쩌둥의 말처럼, 기본적으로 동맹인 세력들 사이에 존재하는 “내부 모순”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처럼 모순은 활발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형태가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미얀마에게 동아시아에 다양한 민주주의 모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 경로와 풍요의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지역 다양성의 일부이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각 나라와 영역들이 지닌 독특한 특성이나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수년간 일본의 제조산업은 첨단 고정밀 제품, 첨단 산업용 로봇 및 기계와 더불어 탄소섬유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용 소재 등의 장비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 경제는 고부가가치 자본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의 70%를 차지합니다. 한국과 특정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일본의 수출품을 이용하여 첨단 중간부품 등의 상품을 제조하며, 이런 부품의 조립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중, 특히 중국은 낮은 노동 비용을 이용하여 소비재를 대량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닛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급사슬구조는 "유기적"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동아시아 산업공동체"는 이미 현실이며, 이는 아시아 각국이 저마다의 장점을 지렛대로 삼아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셋째, 육지에서(삭제?) 눈을 돌려 바깥을 보면, 바다는 장벽이자 분쟁의 씨앗이며 고립의 상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문명의 오랜 역사는 수천 년간 이 규칙에 예외였습니다. 지역해는 문화교류와 교역의 매개체 역할을 했으며, 이웃 나라와 섬들에서 온 어민들은 수많은 풍요로운 어장에서 함께 살고 함께 일했습니다. 근대국민국가의 시대에 접어든 후에야 서양에서 발생한 영토,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관념에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이기주의"의 결과로서 해양 자원을 둘러싼 대립을 야기했습니다.

지난해 8 월,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대만, 중국, 일본이 영토 분쟁은 잠시 제쳐놓고, 수산물 및 광물 자원 관리, 환경의 공동 보호, 해양 연구 수행, 해적행위 대응과 테러리즘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중국해평화안(East China Sea Peace Initiative)>을 내놓고, 이를 통한 센카쿠 열도 문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유럽연합의 탄생에 초석을 놓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얼마 전부터 동중국해 평화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해양자원의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지금이 우리가 마잉주 전 총통의 제안을 센카쿠 열도 문제 해결뿐 아니라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모든 영토 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 중국, 대만은 센카쿠 열도를 놓고,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놓고 영토 분쟁 중이며, 일본은 또한 북방영토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오랜 세월에 걸쳐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분쟁의 존재 자체가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평화적, 건설적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힘을 합쳐 유럽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을 얻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도 합력하여 동중국해의 가스전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해 필요한 동력을 단시간에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영토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영토분쟁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당사자를 도발하는 행위는 분명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행동은 대화를 향한 길 위에 장애물을 놓을 뿐입니다.

넷째, 동아시아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려를 곧 이런 공동체의 실효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미국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국가안보와 같은 현안을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고려할 때 유연해져야 합니다. 동아시아 내의 분쟁을 방지하는 일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할 때 한, 중, 일이라는 동북아 3 국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전에 동아시아 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동반자 협정과 국가안보에 관한 대화는 대부분의 경우 아세안이 주도한 강력한 전략 구상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력 기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중, 일 3 국이 우선적으로 함께 해야 하며, 이는 근년간 동아시아 지역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나 점차 지역적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대만의 참여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국 간 협력의 목표는 동해와 동중국해 주변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와 영역들 간의 동맹 수립이며, 이것은 곧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라는 2 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질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의 전제조건입니다.

.

한-일 그리고 중-일 간 긴장관계 뒤에 놓인 이유 중 하나는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정부의 등장 이래, 일본 연립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하거나, 일본의 침략전쟁행위를 다룬 무라야마 담화와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고노 담화를 개정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이웃 국가들을 도발할 뿐인 말과 행동을 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단결은 더욱 요원해질 뿐입니다. 미국조차도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하며 일본이 아시아를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최근 난징을 방문한 바 있으며, 정치인들이 절대 역사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통 교과서 제작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 간 정부-민간 합작 프로젝트는 아직 충분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허심탄회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아시아 각국의 대학들이 타 학교의 학점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가 이미 한, 중, 일에서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젊은 학생들이 국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저는 남은 세기에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다음 세대가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는 참신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역사인식의 차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또 다른 더욱 중요한 문제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이용을 둘러싸고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을 긴밀하게 엮는 프로젝트를 창안하는 일입니다. 가령, 몽골의 고비 사막은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의 원천으로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동아시아의 에너지 문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천연에너지원 개발과 동아시아 전역에 공급이 가능한 전력 수송망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북한에도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면, 이는 북한의 경제개발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아시아 각국이 공통의 에너지원에 의존함으로써 함께 연계하게 된다면 지역 분쟁이 확대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일본이 국내에 발전소를 신설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진 원자력 기술을 지키는 한편 이 지역의 원자력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도 참여하여 아시아 원자력 관리를 맡을 공동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 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 및 테스트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일촉즉발의 위협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는 유일한 수단으로 오직 군사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지만, 군사력은 정치와 외교의 연장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우리는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1 차적인 우선순위로 두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대만이 상호불신에 빠져 분쟁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간의 냉랭한 관계는 사실상 북한이 더욱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부추기는 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되짚어보고, 지체 없이 동북아시아의 공조를 이루어야만 주변의 모든 나라와 영역들이 힘을 합쳐 북한에 고삐를 채울 수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류문명 발전의 열쇠말은 분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전 총리로서 저는 현 일본 정부가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충실히 배웠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적절한 외교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웅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그리고 중국과 협력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에 근거한 우애의 새로운 형태가 분명히 성립되리라 믿으며 이 목표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